

- 第17代大統領選挙マニフェスト運動の方向と役割

「マニフェスト国民大討論会」報告書

1. 討論会概要

- ・ 主催：中央選挙管理委員会・韓国マニフェスト運動本部
- ・ 日時：2006.9.26
- ・ 場所：韓国ソウルプレスセンター
- ・ 司会：ゾンヨンドク（ソウル大学教授・行政大学院）
- ・ 参加者
 - 発表者
 - 1. 日本の経験と韓国の大統領選マニフェストの課題（金在容・慶應義塾大学マニフェスト研究会）
 - 2. 韓国マニフェスト運動の普及とロードマップ（ユムンゾン・運動本部執行委員長）
 - 討論参加者
 - ソンヨンギル（ウリ党政策副委員長・国会議員）
 - リジュヨン（ハンナラ党政策調整委員長・国会議員）
 - リサンヨル（民主党スポークスマン・国会議員）
 - リヨンデ（民主労働党政策委員長）
 - リミョンユ（国民中心党政策委員長・前副知事）



2. 発表内容

・日本の経験と韓国の大統領選マニフェストの課題（金在容・慶應義塾大学マニフェスト研究会）

- 日本の政党マニフェストの導入と効果
- 韓国の大統領選挙の特徴と選挙公約
- 2007年大統領選マニフェストの論議課題
- 政党の準備課題（党の綱領と党規の改正提案など）
- ・韓国マニフェスト運動の普及とロードマップ（ユムンゾン・運動本部執行委員長）
 - ローカル・マニフェストの評価
 - マニフェストの効果
 - 大統領選挙におけるロードマップ

3. 討論内容

- 党の選挙公約作成過程の重要性を認識
- 党の綱領と党規の改正の検討（ウリ党）
- 候補者と政党のマニフェスト
- 評価の専門性・公正性・客観性
- マニフェストの質
- 選挙改善運動から政治改革運動に方向性の転換

4. 成果と課題

- 政党マニフェストに関する初めての討論会
- 具体的な政党の課題が議論
（党の綱領と党規の改正・候補者と政党のマニフェスト・党の選挙公約作成過程の改善などについて議論・検討）
- 韓国の大統領選マニフェストに関する基本的な問題意識を共有
- 国会マニフェスト研究会（2006.9.18結成・26人参加）と討論内容を共有
- 持続的な討論の必要性で合意

5. マスコミの報道

- KBS / YTN放送
- 中央・連合・東亜など新聞報道

<‘차기’ 대선, 매니페스토 선거로 치러져야>

[연합뉴스 2006-09-29 19:25]



17대 대선 매니페스토 초연회

【서울=연합뉴스】이순우 기자 = 중앙선거위원회 매니페스토추진본부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17대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 발족과 역할 대토론회'에서는 차기 대선을 매니페스토(공약집중) 시스템으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대선이 정책보다 지역·이념 구도로 치러졌다면 다음 대선부터는 이 같은 대결양상에서 오는 국민 분열과 반효율을 막기 위해 각 후보 진영의 정책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

우리보다 먼저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일본에서 이 제도를 연구해온 김재용 게이오대(慶應大) 석좌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지난 2002년 대선을 "지역과 이념 대결 구도이지만 신허정수도라는 정책이 선거의 판도를 가른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신허정수도는 "검증 자체가 어려운 대표적 공약"이라며 "결국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지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대선에서 매니페스토는 '국가 목표와 이념이 명확히 제시되고 핵심 정책의 예산·기한·실행방법 등이 구체적 수치 목표로 표시된 국정운영 기본계획서'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매니페스토 대결이 가능 구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종 매니페스토추진본부 상임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매니페스토의 '2007년 대선 각종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모집 매니페스토 운동 추진 및 대선 매니페스토 추진기반 조성(기한 2006.12) ▲대선 여권다를 포함한 정책쟁점 운동(2007.2)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방향 및 추진계획 협의(2007.3) ▲1차 매니페스토 발표(2007.6) ▲대선 후보자-국민 매니페

http://news.naver.com/print_form.php?office_id=001&article_id=0001421305 2006/10/02

스토 통합,보원(2007.8) ▲대선 매니페스토 발표(2007.9) 등의 순이다.

이에 여야 5당 대표토론자들은 대선 매니페스토에 대한 각자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특히 공약 검증·평가 과정 및 주체의 공정성 확보와 '봉어항 공약'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후보자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투표 결정의 판단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공약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며 일반인,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 등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선정책평가기관을 만드는 방안과 법정토론회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지금까지 매니페스토 운동은 실험적 실천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매니페스토의 정착을 위해 한나라당이 "참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의원은 ▲매니페스토 홍보강화 ▲평가 여건의 공정한 선정 ▲매니페스토 법제화와 선관위의 평가단 운용 ▲정보공개 제도화를 통한 공정한 정보접근 기회 제공 ▲평가채점 방식 공정성 확보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이종대(李容大) 정책위의장은 "공약이 합당하다면 실현 가능성 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력이 평가돼야 한다"며 "계량적으로 평가한다면 5.31지방선거처럼 모두 동일한 공약이 제출돼 매니페스토가 유명무실화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중심당 이명수(李明洙) 국민정책연구원장은 "매니페스토가 득표성과 서면 위주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매뉴얼을 준비하고 지역별, 직능별 시민사회단체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leslie@yna.co.kr

(끝)